

“지역확산 막기 위해 추가 개학 연기 불가피”

문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 발언… “해외 입국자 2주 격리 위반시 강력한 법적 조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초·중·고교 개학 연기와 관련해 “지금으로서는 또다시 학교 개학을 추가로 연기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6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학사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학생들의 학습 피해 뿐 아니라 부모님들의 돌봄 부담도 커지겠지만 아이들을 감염병으로부터 지켜내고 지역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전문가들과 학부모 포함한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결정이었다”며 “불편을 겪는 가정이 많으실 텐데 깊은 이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육부가 당초 목표로 했던 4월6일 일괄 개학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날 오전 언급했던 4월9일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형태의 개학과 맥락을 같이한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감염자의 해외 역유입 사례 증가에 대한 우려와 함께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늘어나는 해외 유입에 대해서도 더욱 강력한 조치와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다”면서 “내일부터 시행하는 해외 입국자 2주간 의무격리 조치가 잘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그러면서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며 “작은 구멍 하나가 뚫을 무너뜨리는 법이다. 국민 모두가 불편을 감수하며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때 한 개인이 모두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껏 취해왔던 것처럼 해외 입국자에 대한 전면 입국금지 조치는 취하지 않되, 2주 간 의무격리 조치를 통

해 보다 철저한 통제를 통해 역유입 사례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통과와 이를 위한 세출조정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당부했다.

이어 또 주요20개국(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 결과물로 채택한 공동성명의 의미를 설명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방직 소방관 ‘국가직’ 된다

5만2516명, 오늘부터... 처우 개선·소방안전교부세 교부

4월 1일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 2516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1973년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돼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됐던 47년, 2011년 국가직으로 일원화해 소방관의 처우를 개선하고 소방서비스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법안이 처음 발의된 후로는 8년여 만이다.

소방청과 행정안전부는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위한 7개 법률과 36개 하위법령이 4월 1일 시행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소방관(5만2516명)의 98.7%인 5만 2516명이 국가직으로 바뀐다.

시·도 소방본부장은 행정부시장 소속의 실·국 단위에서 도지사 직속 부서로 격상되며, 대형재난 발생 시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광역을 초월한 국가적 대응에 나서게 된다. 관할 소방관서가 아닌 사고 현장 거리 중심으로 가까운 출동대와 관할 소방이 동시 출동하는 식이다.

시·도의 재정 여건에 따라 천차 만별이던 소방 인력과 시설·장비, 처우 수준도 동등해진다.

그 일환으로 소방청장이 전국 단위의 소방관 신규 채용시험을 실시한다.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등 통합 개편에 인사 관리를 일원화한다.

징계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한 소청 등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재심 청구나 소방령 이상의 고충의 경우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다.

소방관 직급 명칭에서 ‘지방’을 삭제한 공무원증은 연말까지 발급하도록 했다. 단 신규 공무원증 발급 전까지는 기존 공무원증을 병행 사용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 소방안전교부세 총 3460억원을 교부했다. 이는 2022년까지 총 2만명 증원 계획에 따라 신규 총원되는 소방 인력의 인건비로 사용된다.

소방인력 총원 규모가 많은 경기(581억), 경북(402억), 경남(357억), 강원(301억), 전남(348억), 강원(301억) 등 6(道) 단위에 더 많이 교부했다.

소방청은 2022년까지 소방관 총원이 완료되면 1명당 담당 인구가 지난해 말 기준 926명에서 768명으로 개선돼 선진국 수준과 비스 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일본의 소방관 1명당 담당 인구는 779명, 미국은 911명이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중앙과 지방이 긴밀하게 협력해 국민의 생명을 각종 재난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이 국가적 목표”라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소방관들의 오랜 숙원이던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지역 간 격차 없이 안정적인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시스

정의당 전북도당 총선 선대위 출범

정의당 전북도당이 4·15 총선을 위한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지난 31일 도당에 따르면 총선 상임 공동위원장에 이세우 들녘교회 목사와 서유석(호원대 교수), 손인범(익산 배움터 교장)씨를 선임했다.

공동위원장은 열경석(전주갑), 권태홍(익산을), 최영심(도의원), 김성연, 안윤정, 안현석, 장중수씨 등을 임명하고 415명의 선거대책위원을 선임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선대위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위기가 올수록 더 큰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으로, 최고 전략으로 노회찬 전 대표의 ‘641정신’을 실천한다”고 밝혔다. /특별취재반

나국현 군장대 석좌교수 고상진 후보 선대위원장에



민생당 고상진 후보(익산갑)는 나국현 군장대 석좌교수를 전격적으로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고 선거대책본부를 본격 가동에 나섰다.

고 후보는 “과거 전북도 교육감 단일화 추대위원 대표를 맡아 큰 선거를 수차례 치러 본 적임자로 평을 받고 있기에 나국현 석좌교수를 영입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반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4·15 총선 후보자 이모저모

정동영, 4차산업혁명 1조원 청년 프로젝트 발표

민생당 정동영 후보(전주병)가 ‘전주 4차산업혁명 1조원 청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정동영 후보는 지난 31일 전북도의회에서 “전주가 청년프로젝트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전북경제 성장의 미래를 획기적으로 견인할 산업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 후보는 당선 이후 탄소와 수소, 드론이동체 산업을 전주의 중심사업으로 키우고, 청년 4차산업혁명 단지와 청년희망기를 조성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전주4차산업혁명 청년 프로젝트는 ▲팍팍동 일원 탄소산업단지 조성 ▲팍팍동 일원에 수소산업단지 조성 ▲조촌동, 영등동 일원에 드론이동체 산업단지 조성 ▲팍팍동 일원에 청년4차산업혁명단지 조성 ▲전주전역에 청년희망기 100개 조성이 주요 내용이다.

정 후보는 “전주4차산업혁명 청년 프로젝트 성공으로 전북의 지역내총생산(GDP) 획기적증가와 전북지역내 관련 산업의 파급효과로 전북경제 성장을 획기적으로 견인, 전북 지역내총생산이 전국 도 3위 안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특별취재반

조배숙, 감염병 대응 지역 협의체 구성 제안

민생당 조배숙 후보(익산을)가 지역 내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병 대응 지역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조 후보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 다른 문화권과의 교통이 활발해 질수록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유입은 막을 수 없는 ‘뉴노멀’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전망한 뒤, “지자체별로

민관이 참여하는 감염병 대응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여 감염병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유사시 확산 방지를 위한 지역 내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필요성을 설명했다.

조 후보는 “감염병 대응 사회적 협의체는 보건소, 지역 의사, 한의사, 약사, 지자체 담당자, 지역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하되, 특히 전북 지역은 전북대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가 있는 만큼 체계적인 전염병 연구와 현황을 협의체가 파악하고 미리 대응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후보는 코로나19사태를 극복하고, 향후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방법으로 △감염위기대응기금 설치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 지원 현실화 △전북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소양병원 감염관리 체계 구축 등의 대안을 내놓았다. /특별취재반



유성엽, ‘더 겸손한 민생캠프’ 발족

민생당 유성엽 후보(정읍·고창)가 지난 31일 선거 지원 캠프 ‘더 겸손한 민생캠프’를 발족했다.

유성엽 후보는 “정읍에서 12년, 고창에서 4년, 민천(民鵬)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정읍시민과 고창군민의 단결된 힘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분골쇄신의 각오로 뛰어 4·15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코로나19로 무너진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은 결국 지역을 잘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다”며 “오직 정읍과 고창에서만 정치를 해 온 진짜 지역 사람, 저 유성엽에게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발족식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와 예방,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규모로 치러졌다.

이날 출범한 더 겸손한 민생캠프의 공동선대위 위원장은 신영길 전 정읍시상공회의소 회장, 최은호 전 정읍읍연초조합장, 유종삼 전 정읍고등학교 교장, 지용덕 전 전북도인분과위원회 부위원장, 고희영 전 전북도의원, 정도진 전 정읍시의회 의장, 최백규 전 전북도의원 등이 맡았다. /특별취재반



이원택, 도심재생·도시발전 정책·공약 제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김제·부안)는 김제·부안의 성장거점 연계를 통한 도심재생과 도시발전을 이끌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31일 “국가주도의 경쟁적인 성장 위주 도시개발에서 탈피해 협력적 도시 이용계획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도시기능 존속을 위한 도시 규모 확장과 공공서비스 통합·재배치를 유도해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가야한다”고 공약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주민공동체 복원을 위한 주민주도 도시재생 사업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변도시 연대 협력사업 발굴 ▲새마을개발과 연계한 첨단 광역교통체계 구축 등을 전개해 활력 넘치는 도시로 바꾸겠다는 포부다.

이 후보는 주민주도형 도시재생 사업으로 부안터미널과 김제역 주변을 개발해 골목상권 활성화와 주민공동체를 복원할 계획이다.

또 도서관과 체육센터 등을 겸비한 복합커뮤니티 센터를 조성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꾀한다.

여기에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안정적 주거를 위한 농촌형 국민임대아파트 행복주택을 건립해 정주여건 개선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특별취재반



전주매일 코로나19 예방·극복 캠페인

예방수칙을 준수합시다

칭찬합니다!

용지 사용부터 친환경용지를 고집하는 EBS의 교육이념을 칭찬합니다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친환경을 실천하는 친환경기업이 있어서 칭찬합니다. 바로 대한민국 대표 교재인 EBS 교재입니다. 친환경용지 제작된 친환경 교재를 사용하면 우리 아이의 인성은 물론 환경뿐만 아니라 교재도 재활용해서 가계부와도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친환경용지 1톤을 사용하면 이산화탄소 45%, 대기오염 물질 74%를 줄일 수 있으며 하루 2,700톤 정도 폐지를 재활용하면 매일 30년 생 소나무 43,000구름을 살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간 100만톤 중이 수입에 따른 외화낭비를 막을 수 있고 친환경 산업 육성으로 창조경제와 국가 경쟁력에도 도움이 줄 수 있습니다. 진짜 GR인증 받은 친환경용지로 만든 친환경 교재는 일반용지보다 우리 아이들과 환경, 가계정 제 그리고 국가경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통해 더욱 많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묵묵히 친환경을 실천하는 친환경기업 계속 발굴해서 칭찬 릴레이를 이어가겠습니다.

